2014.6.2(월)

○ 민주언론시민연합 www.ccdm.or.kr / 02-392-0181 ○ 전국언론노동조합 media.nodong.org / 02-739-7285

191만 vs 193만표 세대대결



△ 6월 2일 중앙일보 1면 사진 기사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신문들의 '아전인수'격 선거판 해석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남이하면 불륜, 내가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진다. 11.49%로 마감된 사전투표 결과를 놓고서는 '세대 대결 구도'가 펼쳐질 조짐을 보이는 대목 이라고 분열을 조장하는가 하면 '숨은 보수표 결집이 선거 막판 최대 변수'라는 말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대문짝만하게 지 면에 싣는다. 수도권의 차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고 열을 내더니 통합진보당의 후보 자진사퇴를 놓고는 편법이라고 목소 리를 높인다. 이처럼 이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지 만 결국은 지방선거가 여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도록 이곳 저곳 에 '양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2일자 1면 머릿기사를 〈191만(2030세대) vs 193만 표(5060세대) 세대대결〉이라고 명명했다. 5월 30일~31일 실시 된 지방선거 사전투표 결과를 가지고 쓴 기사다. 20대 투표율에 군,경 사전 투표가 포함돼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번 선거를 '세대 대결'로 몰고 가고 싶은 속내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 한명의 지도자를 뽑는 대선이라면 모를까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지역마 다 후보가 각기 다른데 이 같은 '거짓 프레임'을 내거는 의도는 무 엇이란 말인가.

중앙일보의 5월 29일자 종합면의 〈숨은 보수표 결집하나…선거 막판 최대 변수〉는 더 노골적이다. 기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조 성된 대대적인 정부 비판 분위기 때문에 위축돼 있던 여당 지지 층도 뒤늦게 뭉치기 시작했지만 응집력에선 아직 야당 지지층에 못 미친다.(중략) 이 말은 여권 지지층의 추가 결집 여지가 있다 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남은 선거기간 동안 새누리당 후보들이 '집토끼'를 얼마만큼 더 끌어 모을 수 있느냐가 접전 지역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대희 낙마 사태와 관 련해서도 "선거 때 악재가 악재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 서 초원 복집 사건을 대표적이라고 꼽았다. 비교할 것이 없어 '초 원 복집 사건'을 예로 드는가. 92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기관장들 이 모여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김영삼 후보 당선을 위해 지역 감정을 부추긴 사건 아니던가. 지금 중앙일보는 은연중 또 다시 '우리가 남이가'를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번지는 '野圈의 변칙 단일화'

울산·부산 이어 수도권까지… 與野 격전지 통합진보당 후보들 "새누리 막자" 잇달아 후보 사퇴

여야(與野)의 격전 지역에 출마했던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새누리당의 당선 을 막아야 한다"며 잇달아 후보직을 사 퇴하면서, "선거 막판 새정치연합과 통 진당 간의 편법 후보 단일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통진당 백현종 경기도지사 후보는 1일 국회에서 후보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또 다른 재앙"이라고 말했다. 백 후 보는 새정치연합 김진표 경기지사 후보 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유불리 와 감수해야 할 모든 것을 뛰어넘어 새누 리당 후보의 당선만은 막아야 한다"며 사실상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새정치 민주연합은 "우리와 사전에 상의한 적 없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2012년 총

△ 6월 2일 조선일보 1면 사진 기사

조선일보는 통합진보당의 후보 자진 사퇴를 놓고 '종북 연대' 등 색깔론을 펼치더니 이게 먹히지 않자 이제는 '편법', '사실상 야권 연대'라는 단어를 써가며 부정적 이미지를 덧칠하는 데 힘을 쏟 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통진당과의 연대 불가 방침을 천 명한 바 있다. 또한 통진당 후보의 지지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에게 말 그대로 득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조 선일보는 5월 30일자 〈통진당 부산市長 후보 사퇴〉에서 "지방선 거가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통합진보당 후보의 '사퇴'를 통한 야 권 후보 단일화가 가시화 되고 있다"고 말하더니 6월 2일자에서 "'野圈의 변칙 단일화'가 번지고 있다"며 "통진당 경기지사 후보 가 전격 사퇴해 울산, 부산에 이은 편법 야권 단일화가 수도권에 서도 상륙한 셈"이라고 평했다.

여전히 선거보도 부족-교육감 선거는 '깜깜'

	KBS	MBC	SBS	YTN	ЛВС	TV조선	채널A	소계
선거 보도수	7	21	19	16	24	42	30	159
백분율	7.14%	13.91%	13.87%	9.3%	19.05%	19.44%	15.08%	14.47%
총보도	98	151	137	172	126	216	199	1099

△ 방송사 메인뉴스 선거보도 비율 분석(5월 26일~5월 31일)

선거가 코 앞에 다가온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선거보도량이 여전히 매우 부족했다. 특히 길환영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보도파업을 하고 있는 KBS는 전체 보도수 대비 선거보도가 매우 적다. 또한 보도전문채널인 YTN마저 선거보도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다.

이번 주에도 광역단체장 선거 관련 보도에 치우친 선거보도였다. 그나마 교육감 선거 관련 보도가 나온 것은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딸 페이스북 관련 보도였다. 이처럼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 기 이전에는 교육감 후보 자체가 선거보도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KBS	MBC	SBS	YTN	ЛВС	TV조선	채널A	소계
광역단체장	3	16	14	7	16	24	15	95
기초단체장	0	1	0	0	0	1	1	3
교육감선거	0	0	1	2	0	2	1	6
전체선거	4	4	4	7	8	15	13	55
	7	21	19	16	24	42	30	159

△ 방송사메인뉴스 선거보도 종류별 분석(5월 26일~5월 31일)

선거보도 주제 분석 결과도 여전히 단순보도가 많고, 분석 심층 보도는 부족했다. 그나마 공약정책 검증 분석 보도가 SBS에서 5 건 보도되어서 돋보였으며, 선거가 임박하자 사전투표제 등 선거 제도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도도 많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중앙당, 지역별 후보 선거동정과 관련된 보도가 주를 이루는 선거 보도였다. 한편 TV조선과 채널A는 판세분석 관련 보도가 많았는데, 방송사 자체 여론조사보다 다른 언론기관이나 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세를 분석하는 내용들이 많았다.

캠프보다 더 캠프 같은 종편 시사 "진보에 어부지리" "정몽준, 경선으로 체력소진"

5월 31일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딸이 SNS를 통해 "생물학적 아버지 고승덕은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글을 써 파문이 일었다. 이에 고 후보는 6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딸의 글이 문용린서울시 교육감 후보측과 전처 집안인 박태준 일가의 '정치공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말에 편성된 TV조선과 채널A의 일부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는 보수 진영의 선거캠프의 일원이라도 되는 양 적극적으로 선거 개입 발언을 내놨다. TV조선〈돌아온저격수다〉6월 1일, 출연자 김성욱 씨는 "(이번 건이) 쟁점이 된다면 보수 후보로서 경쟁력은 약간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결과적으로 보수 진영 내부에서의 싸움이 진보 진영에 어부지리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보수층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 참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진보 후보에 어부지리를 줄까 걱정하는 출연진의 '진심'이 그대로 전달된 것이다.

채널A〈이동관의 노크〉(6월1일)에서 조수진 기자가 "(고 후보가) 무대응해도 될 것을 전 가족까지 까발렸다는 점에서 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갖고 올수 있다"고 말하자, 이동관 씨는 "역선택을 하게 할까 걱정된다"며 우려했다. 한편, 이날 채널A〈이동관의 노크〉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관련 정몽준 후보가 들고 나온 이른바 '농약급식' 프레임을 언급했다. 사회자와 출연자 황태순 씨는 "이 문제의 핵심은 '농약'이 아니라



△ 6월 1일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 화면 갈무리

박원순 후보의 '위선' 문제"라고 정리하면서 "이제 막 점화되려고 하는데 고승덕 후보 기자회견이 불을 껐다"고 비난했다. 그는이어 "정 후보 캠프의 정무적 판단이 부족한 것 같다"며 "정 후보의 전략이 좀 더 세밀하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그러자 출연자김미현 씨는 "(정 후보가) 치열한 경선을 치르다보니까 모두 소진해서 점화를 못해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거를 코앞에 둔 종편에서는 여전히 여당 성향의 패널들이 나와 새누리당 승리를 위한 전략과 야권에 대한 공격 포인트를 집요하게 이슈화 하고 있다. 특정 캠프 내부 전략회의를 중계하는 것인지 착각이 들 정도다.

최악의 왜곡 프레임 '농약급식'에 방송도 동조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방송사들은 일제히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의 '농약급식' 공격에 호응해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정몽준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사활을 걸다시피했던 급식공방은 30일 감사원 관계자가 "식자재에 대한 농약검사를 벌인 정부기관이 그 결과를 서울시에 알려주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발언함으로써 사실상 근거없는 네거티브였음이 밝혀졌다. 오마이뉴스 〈867개교 농약급식? 감사원 "서울시 책임 아니다"〉(5/31, 윤근혁 기자) 보도를 보면, 감사원 관계자는 "서울시와 친환경유통센터는 정보 미공유로 인해 해당 업체가 잔류농약 위반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따라서 감사원 처분에서도 서울시에 대해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몽준 후보 측 입장 전달에만 급급

그러나 언론의 보도는 6월 1일까지도 이렇게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전혀 담지 않은채 정몽준 후보의 주장만을 옮기는데 집중했다. 방송사 중에서 농약급식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친환경 급식 논란'으로 표현으로 방송한 곳은 JTBC뿐이었다. 대부분의 방송이 정몽준 후보 측의 공격성 주장과 발언들을 상세히 보도했다. 반면 박원순 후보 측의 주장은 '침소봉대'했다는 등의 주로 방어적인 내용만을 보도했다. 기자가 양쪽의 주장을 설명하고 후보 발언을 녹취, 인용한 것이 양적으로 비슷하더라도 사실상 박원순 후보 측에서 따온 것은 핵심을 핵심을 짚어주거나 제대로된 해명을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따라서 시청자는 박원순 후보 측이 변명과 거짓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게다가 이러한 기계적 균형도 지키지 않은 보도들도 많았다.

채널A, "뇌송송 농약잔류 식품을 어린애들한테 공급"?!

친환경 급식을 둘러싼 논란을 다룬 가장 어이없는 방송은 또 종 편채널 시사프로그램에서 나왔다. 채널A〈돌직구 쇼〉에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측이 제기한 '농 약급식' 문제를 주제로 다뤘는데, 패널들은 하나같이 박원순 후보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정 후보 측의 주장을 적극대변했다. 특히 신동준 씨는 "이건 세월호하고 똑같이 위험한 건데, 백성들을 갖다가, 이거 어린애들 죽인 것"이라면서 "지금 세간에 '운피아'(운동권 마피아)라는 말이 돈다", "수의계약해서 지들끼리 시중보다 30 내지 50% 비싼 값으로 한데다가 거기다 '뇌송송' 농약 잔류 식품을 어린애들한테 공급했다. 이건 천인공노할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출연자 허문영씨는 "기자의오랜 경험에서 볼 때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느낌이 확 온다"면



△5월 29일 채널A 〈돌직구쇼〉 화면 갈무리

서 "검찰에서도 실제 납품과정에서 횡령 배임, 나쁜 식재료를 비싼 값에 납품을 했다는 느낌이 오는데, 누가 시장이 되든 철저히 파헤쳐야할 문제"라며 박 후보를 범죄자로 낙인찍었다.

TV조선 〈급식논란에 무소속에 후끈〉(30일, 백대우)은 그나마다른 방송에서는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추던 틀에서 벗어나서 새누리당의 각양각색 주장을 모두 담아줬다. 기자는 "새누리당은이번 사건을 '농약급식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라고 말하고, 박대출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고문,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발언을 담았다. 이에 대한 박원순 후보 측의 대응에 대해서는 "악질적 네거티브라며 발끈했습니다"라는 기자발언과 함께 진성준 박원순 캠프 대변인과 박원순 후보의 발언을 보태는데 그쳤다.

농약에서 한술 더 떠 살충제 타령?!

채널A 20번째 꼭지 〈급식서 검출 농약 대부분 살충제〉(30일, 류병수)에서는 "잔류 농약 성분의 상당수가 살충제와 벼멸구 약에 쓰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이 공개한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급식에서 농약이 검출된 학교는 총 24곳. 전수 조사가 아닌 표본 조사여서 농약 급식과 관련된 학교수는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약이 검출된 학교들은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포함해 동작과 강동 등 서울시내 13개 자치구에 위치 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보도는 김세완 신길 연세의원 원장이 "검출된 농도만으로 급성질환이 바로나타나지는 않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각종 질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 뒤에 박원순 후보측의 해명은 짧게 들어갔다. 진성준 대변인이 "교육청에서 적발한 것이라는데 서울시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서울시로서는 알 도리가 없었던 거죠"라는 한마디 말만 녹취 인용됐다.



△ 5월 28일 채널A 〈종합뉴스〉 화면 갈무리



△ 5월 29일 TV조선 〈뉴스쇼 판〉 화면 갈무리

'유병언 정보'에 날뛴 TV조선-채널A

"체액 휴지", "널브러진 침대" 선정적 보도 '심각'

공정선거보도감시단은 언론의 유병언 관련 보도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우려하며 이 같은 일이 정부의 책임을 반감시키는 '물타기 보도'일 수 있다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유병언 씨에 대한 마녀 사냥식 보도태도가 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선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TV조선이 유병언 씨의 체액이 묻은 휴지와 신 모 여인에게 '모발검사와 소변검사, 여성으로 견디기 어려운 검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채널A는 〈은신처에 체액 묻은 의문의 휴지〉(5월 28일)에서 앵커가 "유병언씨가 나흘간 숨어있다 달아난 순천의 통나무집에서 체액이 묻은 휴지가 발견됐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체액'과 관련된 특별한 내용이 없지만, 선정적인 제목을 뽑았다.

TV조선은 더 선정적으로 〈30대 여인···'교주와 신도 이상의 관계'〉(5월29일)라고 제목을 달았다. 신도 신 씨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말한 내용이라며 "신 씨가 체포된 후 모발검사와 소변검사

를 받았다"며 "여성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검사에도 임했다"고 보도했다. 기자는 "유 씨와 성관계가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약물을 복용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언급했다.

TV조선은 30일〈검찰 '매우 특별한 관계'〉에서 "신 모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라고 앵커멘트한 뒤, "검찰은 최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생활과 관련된 일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이 사안은 유병언 씨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흘려서 실망한 신도들이 수사에 협조하게 하겠다는 목적으로 소위 검찰의 '흘리기'와 언론의 '받아쓰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런 경우 언론이 부적절한 수사방식을 지적해야함에도 오히려 언론이 검찰의 정보를 이용해 선정적으로 보도하면서 '언론으로 인한 2차성희롱'을 한 것이다.

동아일보, '채널A'부터 돌아보고 ,'KBS' 비판하라

'막말 편파 방송'의 대명사격인 '채널A'를 소유한 동아일보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묻는 기획 기사를 내보냈다. 동아일보가 공영방송의 공정성, 선정성, 방만 경영을 지적할 수야 있겠지만 우선 채별A의 편파성과 선정성 그리고 설립 과정의 의혹에 대한 반성이우선해야한다. 한마디로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동아일보가 5월28일~30일까지 연재한 '재난의 KBS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KBS 기자들이 길환영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거부에 들어갔고, KBS 구성원들이 파업을 앞둔 상황에서 나왔다. 28일 동아일보는 KBS의 경우, 〈새 사장 선임→편파 논란→'야노조 저항'〉이 연례행사라며 낙하산 인사 관행에 보도국이 줄을

섰고 결국 KBS 조직의 정치화가 저널리즘의 질을 하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 방식을 바꿔야 한 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지면에 싣기도 했다.

동아는 이번 사태를 'KBS 공식'이라 도식화하면서도 정작 핵심인 '청와대와 길환영 사장의 보도 개입'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애써 모른 채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약속은 마치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역할이 끝났고, 정치권의 미온적 대처로 처리 되지 않았다는 뉘앙스를 줬다. 동아일보는 KBS의 대수술을 지적하기에 앞서 채널A부터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채널A의 경우 방송을 빙자한 여당의 선거운동을 대신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5.18 폄훼 등 막말 보도 등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설립시 우회 출자 등 방송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한 채널A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방송이다. '귀태'가 누굴 휴계하려 드는 것인가.